

[**종합**]

■ **미국산 쇠고기 파동**

③ **다른 나라는 어떻게**

日 20개월 미만 수입... 광우병맨 수입 중단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 세계 117개 국가 중 개방 폭이 가장 커 사실상 완전개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협상 타결로 30개월령 미만의 소는 SRM(광우병위험물질)이라는 특정위험부위(7개)에서 편도와 회장(소장 맨살) 등 2개 부위만을 제거하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에 대한 빗장도 풀렸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와 전문가, 시민들은 전 세계 미국 쇠고기 수입국들이 20개월, 또는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 등 자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협상안은 건강에 대한 주권을 잃은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일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불응하고 광우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입 소 연령은 20개월 미만

이어 한다'는 요구를 미국에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 평균 수출하는 쇠고기는 120만이며 이중 한국과 일본이 수입하는 양이 50~60%에 달해 사실상 다른 100여개 국가들의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 27개국 12개월 이상 '위험물질' 무조건 폐기

대만·중국은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미국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일본은 2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을 비롯한 수입 10위권 및 검역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등 선진국들도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있다.

대만과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05년 미국과의 협상 시 28개월짜리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했다는 이유를 들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올 수 있도록 협상을 체결했다.

또 우리나라는 현행 수입물량의 1%에만 검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일본은

수입 물량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본은 곧바로 수입 중단조치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SRM 7가지 전체를 수입할 수 없지만 30개월 미만에서는 SRM 2가지(편

도, 소장끝)에 대해서만 수입이 금지돼 있어 나머지 뇌, 안구, 척수, 척추, 내장 등 5가지는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 등은 모든 SRM를 제거토록 하고 있으며,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국 등 유럽연합(EU) 27개국은 12개월 이상 소의 SRM 모든 부위를 무조건 폐기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시장에 완전개방을 요구한 미국도 자국과 동등한 국제무역사무국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갖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연구위원은 "이번 협상타결로 30개월 이상 소의 SRM 부위가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철저한 검역시스템과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 설

혁신도시 재검토에 공동대응 나선 '지방'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반발, 비수도권의 공동대응이 본격화됐다.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전국 14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동건의문을 보내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당연하다. 혁신도시시는 정부와 국회 등이 합의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지만 새 정부의 입장은 애매모호하다. 협의회는 이달 안에 시·도별 규약대회를 갖고 지방분권단체 등과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 결집들은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6월까지 공기업 민영화 및 폐합 방안을 포함,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혁신도시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승수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혁신도시

시의 부실화를 예고했다. 이전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민영화한 공기업은 민간 소유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은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지방이전 대책없이 어떻게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의 이전 없는 혁신도시시는 빈껍데기로 불과하다.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불가피하다면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선(先)이전, 후(後)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애매한 발언으로 혁신도시를 흔들어서 '지방'의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다.

막으론 5·18기념행사 시민 참여 아쉽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제28주년 기념행사가 어제부터 시작했다. 기념행사는 '오월의 희망으로 세상을 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7일까지 광주시에 곳곳에서 열린다. 삼부대 영창 체험, 영화상영, 역사기행, 학술대회 등 다양하다.

전국 12개 도시에서도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다. 부산 민주공원에서는 8~26일 시민한마당이 펼쳐지고 대구 경복대에서 12~17일 '5월정신' 계승행사를 갖는다.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인천, 전북 등에서도 기념식과 사진 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28주년을 맞는 심정은 착잡하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을 갖게 된다.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감회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광우병 '괴담'에서 드러나듯 온통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쏠려 있다. 광주·전남시민단체 등은 10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갖는다. 기념일을 전후해 노동자·대학생·농민단체 등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

5·18기념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 기념행사는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꾸며졌다. 행사위원회는 조기 달기 및 리본 착용, 차량 전조등 켜기 운동 등을 벌인다. 헌혈과 '주먹밥 나누기'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운동도 전개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것이다.

기념행사의 주인공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5월정신'의 진정한 계승은 생활 속에서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해 '5월 광주'의 오늘을 되새겨 보았으면 싶다.

여야 '美 쇠고기 수입 고시' 대립

정부·여당 "15일 강행" 야권 "효력정지 가처분"

정부·여당과 야권·시민단체는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따라 15일 이행될 예정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강행 여부를 둘러싸고 날선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9일 장관 고시를 즉시 연기하라고 압박했지만, 여권은 예정대로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민주당은 오는 13일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17대 국회 내에 국회 국정조사와 정문헌 농수산식품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장관 고시 입법 예고와 관련, "정부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제대로 모른 채 6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축소했다"며 "40일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를 연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은 반면 장관 고시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분리해 대응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외교통상부와 FTA 비준안 '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입장을 정하고 FTA 비준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정부 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국내 비준동의안 추진 현황과 미국의 한미 FTA 인준여건,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뒤, FTA 협정 발효를 위해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등 24개 관련 법률안을 병행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 법안 발의 국민민주권수호시민연대와 통합민주당 최석 의원일 9일 국회에서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금지' 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광우병 취약 결론 못 내"

의협 입장 밝혀... "광우병 감시 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따른 광우병 공포 확산과 관련, 현재로서는 한국인이 사람광우병(vCJD)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람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퇴행성신경질환으로 환자와 접촉한다고 해서 전파되지 않으며, 공기를 통해서도 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소광우병은 소의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사람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한국인의 프리온 유전자 중에서 '메티오닌-메티오닌형(MM형)'이 서양인에 비해 빈번하다는 보고가 있고, 현재까

지 보고된 사람광우병 환자 가운데 '메티오닌-메티오닌형'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단유전학연구를 통한 상대비교위험도 평가가 이뤄지지 전까지는 한국인이 사람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결론은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지만 잠복기가 수십 년 이상으로 길 수 있기 때문에 소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사람광우병이 발생할 위험성은 (지금의 연구단계와 연구수준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따라서 사람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광우병 발생을 예방하고,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검역 등 관리 시스템을 수립해야 하며, 국내의 사람 및 동물들에 발생하는 모든 프리온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추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경기 하강 국면 들어섰다"

내수 부진에 물가 오름세 겹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통과해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9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유가 등으로 물가 오름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경기 둔화의 근거로 우선 3월 광공업 생산이 두자릿 수(10%)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고, 3월 소비자판매(4.2%) 역시 작년 연간(5.3%) 및 4.4분기(4.5%) 수준을 하회한 점을 들었다.

3월 설비투자추계(0.4%) 역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취업자는 임시·일용직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8만4천명 증가에 그쳤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대불산단 '제2 전봇대' 철도 시설물 이설 추진

대형 블록 운반에 장애...철거 후 우회도로 이용 검토

대불산업단지에서 대형 선박블록 운송을 방해하는 '제 2의 전봇대'로 지목돼 온 철도 시설물의 이설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해양항만청, 산업단지공단, 철도시설공단, 영암군, 대불산단 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은 9일 오후 대불산단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무실에서 대불부두 입구 철도 건설목에 설치된 이동전차선(열차통과용 이동식 철로)의 이설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형 선박블록 업체인 (주)한영산업 한승호 이사는 "대불부두 입구의 최대 도로폭은 31m 이나 이동전차선의 시설

물이 도로의 6m를 넘겨해 대형 선박블록(폭 30m 이상)의 대불부두 운송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설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명태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은 "현재 문제가 된 전차선의 구조물을 도로밖으로 이설할 경우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열차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불부두 입구에 설치한 이동전차선으로 인해 대형블록이 대불부두로 운반되지 못하고 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여전히 대화가 안된다

'쇠고기 파문' 정부 신문광고 논란

규정 무시 민간업체에 위탁...청와대가 조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정부의 해명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일과 6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를 게재하면서 민간 광고기획사인 Y커뮤니케이션에 광고를 대행토록 했다.

그러나 '총리 훈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이 대행토록 돼있어 정부가 직접 특정 민간회사에 광고를 맡긴 것은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청와대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일선 부

처의 광고 발주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홍보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내부 방침을 어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광고는 해당 부처 소관 사항으로 청와대가 전혀 개입한 바 없다"며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쇠고기 광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지난 5일과 6일의 정부 광고는 연휴 기간인 관계로 제작사가 광고를 제작해 신문사에 직접 공급했으며 사후에 수수료 지불 등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정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회2부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